비상경제장관회의
24-3-3
(공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2024. 2. 14.

관 계 부 처 합 동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요약)

1 지원 방향

□ 첨단산업 혁신 거점으로서 **'23.3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23.7월 7개 첨단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정

* 15개 국가첨단산단, 7개 첨단특화단지, 10개 소부장특화단지, 19개 연구개발특구,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제3판교, 송도, 오송 등

□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속한 조성**과 **원활한 기업투자**를 뒷받침

* (Phase1) 단지계획 수립 전 (Phase2) 단지계획 수립승인 (Phase3) 부지공사 (Phase4) 기업 입주

2 주요 지원사항

1. 공통 지원

□ **(국가산단)**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 통상 공공예타 대상 사업은 2, 6, 10월 선정 → 수시 선정 시 기간단축 효과

○ 특히,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용인 국가산단과 같이 **예타면제 추진**

□ **(첨단특화단지)** **재정지원 횟수 제한 없이**(현재 1회만 가능)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 비율 상향*** 추진

* (현재) 최소 5% (수도권, 투자규모 하위구간) ~ 최대 30% (비수도권, 투자규모 상위구간) →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24.3) 및 고시 개정 후 조정 예정

□ **(연구개발특구)** **연구와 창업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용적률 상향*** 추진

* (現) 건폐율 30%, 용적률 150% → (改)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상한없이 상향

2. 수도권 · 강원권

□ (첨단용인·평택 반도체) 향후 교통량 확대가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 추진**

○ 교통량 분석 등을 검토하여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구간 조정** 등 **교통망 개선안 마련**('24.上)

□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 시 **공공기관 건축 설계공모 의무**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설계 공모의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신속한 심의** 추진

□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 등 **총사업비 협의기간**을 **1년에서 2개월로 10개월 단축**

3. 충청권

□ (국가대전 나노·반도체) 예정지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상구역을 제외**한 **산단부지 사업계획 수립** 및 **예타 신속 추진**

□ (첨단천안·아산 디스플레이)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특수차량 운행허가 지원**

○ **국토부** 중심으로 **원스톱 협의체계를 운영**하고, **허가기간 연장** 시 **제출 서류 간소화**(~'24.6)와 **최적경로 도출 시스템 구축** 추진(~'26)

□ (첨단오창 이차전지) 이전에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동일 필지 내**에서 **경미한 건물 신·증축**에 대해 **재평가 면제 근거 신설***

*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3.11.30~'24.1.15) 후 법제처 심사 진행중

□ (연구대전 K-켄달스퀘어) 출연연 유휴부지, 대전시·과기부 등 소유 부지를 활용한 **창업보육** 등 **융복합 공간 조성방안 마련**('24.3)

○ **특구개발계획안 수립**('25.1), 개발구역의 **토지 용도**를 녹지구역에서 **상업·공업구역으로 변경*** 하는 등 공간확보 지원

* 예시: 녹지구역(건물 최대 7층) → 상업·공업구역(건물 높이 제한 미적용)

4. 호남권

□ (첨단새만금 이차전지) 새만금 특화단지 산업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생태면적 확보 의무를 10%에서 5%로 완화하고,

○ 이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 처리수의 성분별 농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염 처리수 관련 기준 명확화

□ (국가광주 미래차)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계획된 규모로 원활히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고흥 우주발사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5. 영남권

□ (첨단포항 이차전지) 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3월 중 첨단위 상정)

○ 기업이 산단계획 변경 후 추진해야 하는 부지평탄화 작업을 LH가 산단계획 변경 완료 전에 착수하여 기업입주를 6개월 단축

□ (국가창원 방위·원자력)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계획된 규모로 원활히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가울진 원자력수소)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3 향후 계획

□ 클러스터별 협의체, 소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하여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안착 지원

□ 클러스터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 지속 모색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정 현황 2

Ⅲ. 클러스터 지원 추진방향 4

Ⅳ. 맞춤형 지원 방안 5

Ⅴ. 주요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31

Ⅰ. 추진 배경

□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첨단산업 관련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치열

○ **첨단산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성 혁신의 원동력**이자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

○ **각국**은 **경제·안보적 차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

* (美) 반도체 투자기업에 5년간 390억불 보조금, 투자세액공제(25%) 지원(CHIPS)
(日) 첨단 파운드리 투자 보조(기금 활용), 전략물자 투자·생산·판매 비례 세액공제(40%)

○ 우리도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세제·금융 등 기업투자 지원***,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중

* (세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중견/중소기업(%) 15/15/25(증분 10)
(금융) High5+ 중점 첨단산업 분야에 향후 3년간 100조원+α 규모 정책금융 지원

□ 글로벌 역량 강화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중심 혁신생태계 조성 필요

○ **첨단산업 지원정책**은 관련 기업들이 **집적**하여 **활발히 교류·협력**하는 **첨단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때 **효과 극대화**

▪ 정부는 **지역별 강점** 등을 감안, **첨단산업 혁신 거점**으로서 **국가첨단산단, 첨단 특화단지**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정**

* 정부 출범 후 신규 지정 클러스터: 국가첨단산단(15개, '23.3),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7개, '23.7), 소부장 특화단지(5개, '23.7), 글로벌혁신특구(4개, '23.12) 등

○ 심화되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지정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

⇒ **역동적인 첨단산업 혁신생태계가 조속히 조성·안착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Ⅱ.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황

□ **(국가첨단산단)** '23.3월 지역별 산업 거점과 연계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 생산거점**으로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대상산업	후보지		대상산업	후보지	
반도체	경기	용인	수소저장·활용 제조업	전북	완주
나노·반도체	대전	–	방위, 원자력	경남	창원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충청	천안	미래차·로봇	대구	–
철도		오송	바이오의약(백신 등)	경북	안동
수소·미래차		홍성	소형모듈원전(SMR)		경주
미래차 핵심부품	광주	–	원전 활용 수소		울진
우주발사체	전남	고흥	천연물 바이오	강원	강릉
식품(푸드테크)	전북	익산	총 15개소		

□ **(첨단특화단지)** '23.7월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육성을 위해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초 지정**

대상산업	지역		대상산업	지역	
반도체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경북	구미
디스플레이	충남	천안·아산	이차전지		포항
이차전지	충북	오창	이차전지	울산	–
이차전지	전북	새만금	총 7개소		

□ **(소부장특화단지)** 안정적인 핵심산업 소부장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10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최초 5개 '21.2, 추가 5개 '23.7)

대상산업	지역		대상산업	지역	
반도체	경기	기존 용인	탄소소재	기존 전북	전주
		신규 안성	미래차	신규 광주	–
이차전지	충북	기존 오창	미래차	신규 대구	–
바이오		신규 오송	정밀기계	기존 경남	창원
디스플레이	충남	기존 천안·아산	반도체	신규 부산	–
			총 10개소		

□ **(글로벌 혁신 특구)** '23.12월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4개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 선정**

대상산업	후보지		대상산업	후보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부산	–	보건의료데이터	강원	–
첨단재생바이오	충북	–	에너지 신산업	전남	–
※ 세부지역은 특구위원회에서 확정('24.4月, 잠정)			총 4개소		

□ **(연구개발특구)**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19개(광역 5개, 강소 14개) 연구개발특구 지정('05~)

대상산업	지역		대상산업	지역	
IT 융복합, 바이오메디컬 등	광역대덕	유성구 대덕구	광전자융합, 스마트에너지 등	광역광주	광산구 전남 장성군
첨단소재/부품, 미래형자동차 등	광역대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자원/바이오 등	광역부산	강서구 남구 금정구 부산진구 연제구 사하구 영도구
농생명 융합, 미래수송/기계 등	광역전북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디지털 헬스케어	강소서울	홍릉
ICT 융복합	강소인천	서구	ICT 융복합	강소경기	안산
차세대 자동차부품	강소충남	천안·아산	스마트IT 부품·시스템	강소충북	청주
친환경전기차 소재·부품	강소전북	군산	지능형 태양광·ESS	강소전남	나주
바이오 의약 신소재	강소강원	춘천	스마트 제조 시스템	강소경북	구미
첨단 신소재	강소경북	포항	미래형 전지	강소울산	울주
의료기기	강소경남	김해	전기·기계	강소경남	창원
항공우주 소재·부품	강소경남	진주	총 19개소		

□ **(기타)** 지자체 주도로 제3판교, 송도, 오송 등 신산업(ICT·자율주행, 바이오 등) 분야 클러스터 조성 추진중

○ (제3판교) 기업[직]·기숙사[주]·문화공간[락]·대학[학] 집적을 통해 반도체·ICT·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29)

○ (송도) K-바이오 랩허브* 등 창업보육시설, 대학, 병원 등을 밀접 배치하여 대·중소기업간 융합·상생 기반 조성(~'29)

* 단백질의약품, 항체, 백신, 세포·조직치료제 등 신약개발 창업기업을 위한 바이오 연구시설·장비, 입주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 제공

○ (오송) 오송 3산단 내 KAIST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입주기업 및 상업·금융·주거공간을 혼합배치하여 'K-바이오 스퀘어' 조성(~'30)

Ⅲ. 클러스터 지원 추진 방향

◇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단지별 진행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ㅇ 조성 진행중 단지(Phase ❶~❸)는 행정절차 신속처리 등 조기 조성 + 입주·운용중 단지(Phase ❹)는 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등 지원

□ **(조성단계 점검)** 첨단산업 클러스터별 조성 진행 상황을 4개 단계로 나누어 연도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

<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단계 >

단지 조성 단계	단계별 주요 추진 사항
(Phase ❶) 단지계획 수립 前	기본협약,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Phase ❷) 단지계획 수립·승인	산단·건축계획 수립·심의, 영향평가 등 부처 협의
(Phase ❸) 부지 공사	부지 확보 및 착공,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Phase ❹) 기업 입주	공장 건설, R&D 등 특화단지별 사업 추진

□ **(조성지원)** 클러스터별 지원 협의체, 현장 간담회 등 통해 파악한 클러스터별 애로·지원필요 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 지원

ㅇ 범정부 추진지원단[1](국가첨단산단), 특화단지 범부처 협의체[2](첨단·소부장 특화단지) 등 클러스터별 협의체를 통해 애로 해소

1」 국토부 1차관(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국가산단 소재 광역시·도, 사업시행자 등
2」 산업부 1차관(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특화단지 소재 광역시·도, 관계기관 등

ㅇ 첨단산업 클러스터 소관 지자체 및 조성 현장 등을 수시 방문하여 정부의 클러스터 지원방향 공유 및 지원필요 사항 파악

□ **(클러스터 연계)** 각 클러스터가 보유한 첨단산업 밸류체인 내 강점을 기반으로 클러스터간 연계 방안 지속 모색

* (예) 부품 관련 클러스터의 생산품을 조립·완성 단계 클러스터에서 활용 등

⇒ 이번 방안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지자체 현장 간담회*, 서면 접수 등을 통해 파악된 조성 진행단계(Phase ❶~❸) 지원 방안에 집중

* (1.3) 충청권 (1.5) 호남권 (1.9) 호남권, 수도권 (1.11) 영남권 등

ㅇ 첨단·소부장특화단지 등 입주·운용 단계(Phase ❹) 클러스터의 혁신 생태계 지원 사항은 추후 특화단지별 지원방안 등을 통해 발표

* 첨단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24.3), 소부장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24.3)

Ⅳ. 맞춤형 지원 방안

1 다수 권역 공통 지원

1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 또는 면제 추진

○ **(현황)**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용인**은 **예타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기타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 진행중**

○ **(지원방안)**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예타 신속처리 및 면제 추진**

- 14개 산단의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4개월**(현 7개월) **내 신속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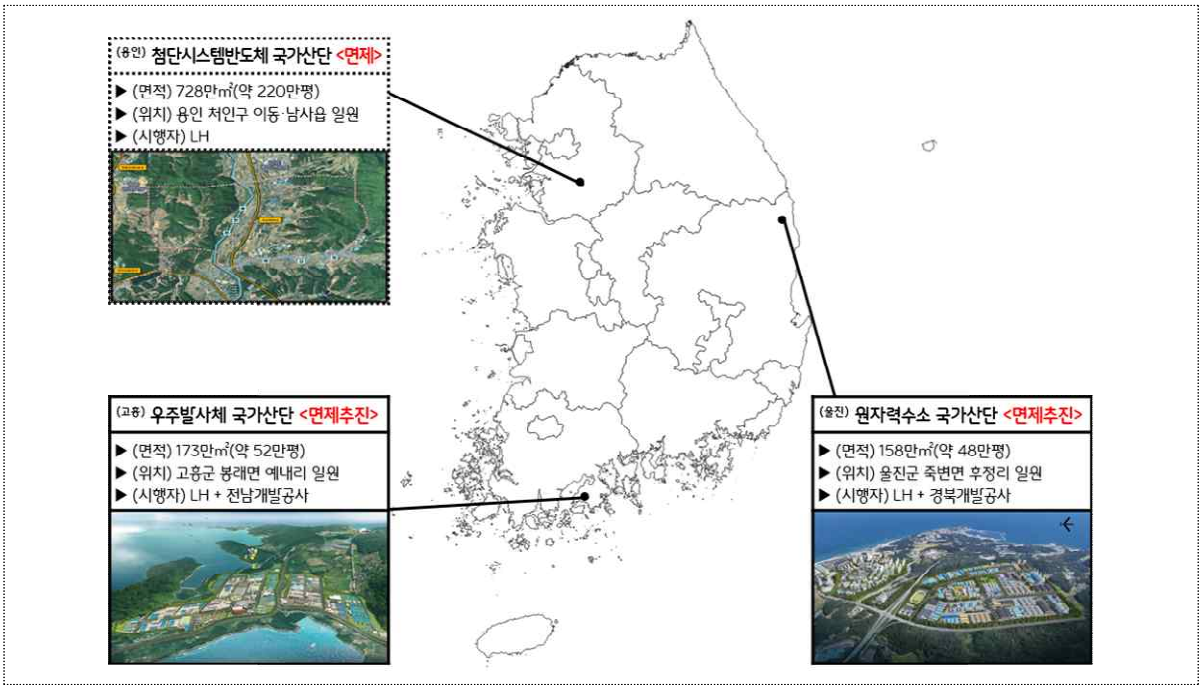
* 통상 공공예타 대상 사업은 2, 6, 10월 선정 → 수시 선정 시 기간단축 효과

- 특히,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면제 추진***(추후 면제 단지 추가도 검토)

* 국가산단에 입주할 기업수요가 확정된 이후 예타면제 추진
※ 용인은 '25.상반기 내 산단계획이 신속히 승인되도록 범정부 추진지원단 등 통해 관리

○ **(기대효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7개월 단축) **또는 신속 처리**를 통해 **조성기간을 3개월 단축**하여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 지원** 기간단축

< 예타면제 추진 국가산단 현황 >



2 (국가산단)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불확실성 해소

○ **(현황)** LH,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으로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LH, 지자체간 기본협약 체결 협의중이나,

-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산단 조성 관련 비용부담 등은 지자체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
- 중앙투자심사를 거치기 전 LH·지자체간 기본협약에 동 사안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협약 체결 지연

* (LH) 협약에 포함 필요 vs (일부 지자체) 우발채무 발생 우려로 심사 전 협약 포함 곤란

○ **(지원방안)**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안내하여 기본협약 체결 관련 불확실성 해소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및 지방의회 의결 이전에 맺는 기본협약은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기본협약에 담을 경우 중앙투자심사(행안부) 전 매입·비용부담 확약을 포함한 기본협약 체결이 가능*

* 다만,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의회 의결 요청 전에 받을 필요

○ **(기대효과)** 신속한 기본협약 협의를 통한 산단 조성 가속화 기간단축

3 (국가산단)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국가산단 조성 관련 손실 특례 부여

○ **(현황)** 정부에서 조성 추진중인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14개 단지*를 LH가 단독 또는 공동 사업자로 참여중

*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은 광주도시공사에서 100% 추진

- 다수 사업에 따른 손실 발생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사업비 부담 등으로 LH의 적극적 대응 곤란

○ **(지원방안)**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해 다수 산단에 전문성이 있는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점 감안,

-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려 검토

○ **(기대효과)** 공동사업 시행 시 경영평가 부담에 따른 책임 분담 등 이견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산단 조성사업 추진 지원 지원확대

4 (국가산단) 업종·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비타당성조사 입주수요 기준 적용

○ **(현황)** 현재 산단 예타 입주수요 기준은 R&D 단계인 첨단산업(예: SMR, 수소)의 특성 및 비수도권의 특수성 반영에 한계 존재

- 입주수요 파악 위한 설문조사 방식[1]이 첨단산업 특성 반영 제한[2]

1」 현재 10~299인 기업 대상 설문조사 위한 표본 추출 시 중분류 단위 활용
2」 (예시) 수소산업의 경우 여러 중분류 항목에 걸쳐있으나, 동일 중분류 해당 기업 중 非수소산업 기업이 표본으로 추출될 경우 입주수요 과소평가

-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체결된 MOU를 활용하여 수요를 반영하나,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기업체 수와 규모가 작아* MOU 체결이 수요에 반영되기에 한계

* 300인 이상 기업의 71%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나머지 29%는 14개 광역지자체에 산재(평균 2% 수준) ('22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 **(지원방안)** 현행 기준에 업종·지역 특성 감안·반영('24.5, 잠정)

- 첨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추가* 및 조사방식 개편

* (예시) R&D 특성이 매우 높은 첨단산단의 경우 R&D 예타에서 적용하는 가치창출 편익 추정 방법론 적용 가능성 검토

- 비수도권의 경우 MOU를 통해 수요를 반영하는 기업규모 완화 (예: 300인 이상 기업 MOU만 반영→200인 이상 기업 MOU 반영 가능성 검토)

○ **(기대효과)** 예타기준 현실화를 통해 첨단산업·비수도권의 산단 입주 실수요를 정확히 반영 가능 지원확대

5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예산 신속 지원 및 재정지원 제도 개편 추진

○ **(현황)** 전력·용수·폐수·도로 등 첨단 특화단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원중*

* '23년에 용인·평택에 전력·용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각 500억원 지원

- 현재 투자규모·지역 등에 따라 총사업비 최대 30%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별 1회 한정*으로만 지원하여 적기 조성에 애로

* 전력·용수·폐수·도로 중 우선순위 높은 2가지(각 250억원 한도)

○ **(지원방안)** 기반시설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지원제도 개편 추진

▪ '24년 편성된 기반시설 지원예산*을 실시설계 완료 지역부터 신속히 집행하고 타 단지도 조성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적기 지원

* 포항(용수) 154억원, 새만금(용·폐수) 47억원, 구미(도로) 200억원, 울산(전력) 37.5억원

▪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기업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지원한도 차등화 검토

* (현재) 최소 5% (수도권, 투자규모 하위구간) ~ 최대 30% (비수도권, 투자규모 상위구간)
→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24.3) 및 고시 개정 후 조정 예정

○ **(기대효과)** 단지별 여건에 맞게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관련 적기·적정 수준 재정지원 가능 → 첨단 특화단지 신속조성 지원확대

6 (연구특구) 강소 연구개발특구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현황)** 강소 연구개발특구는 광역특구의 성공모델을 기초지자체에도 확산하기 위해 '19년 도입, 현재 14개소 지정·운영중

* 강소 특구별 사업기간 : 1기(6개, **'20~'24**), 2기(6개, **'21~'25**), 3기(2개, **'22~'26**)

▪ 강소특구가 광역특구(대전·광주·대구·부산·전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별 소규모·고집적 클러스터*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강소특구 제도의 고도화 긴요

* 지역대학 등 연구기관(R&D), 기업(실증·창업·컨설팅 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광역특구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고부가가치 성과 창출 도모

○ **(지원방안)** 광역 연구개발특구와 차별화된 강소특구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특구 육성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24.上)

▪ 특구별 특화분야 구체화, 자율성 확대, 성과 평가에 기반한 특화발전 및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 **(기대효과)** 강소특구가 지역별 첨단산업 발전의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 강소특구 사업 내실화 지원확대

7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의 건폐율·용적률 상향

○ **(현황)**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출연연이 밀집하여 신기술 연구 및 창업·사업화 공간 확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 자연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30%), 용적률(150%) 제한으로 연구공간 확장, 벤처·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에 제약

○ **(지원방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상향*

* 높이 제한 7층 범위 내에서 상한없이 상향 가능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개정안 : (입법예고) '23.12.22~'24.1.11, (시행) '24.上

○ **(기대효과)** 특구 내 연구기관, 벤처·스타트업 등 고밀도 집적 지원확대

8 (공통)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개발계획에 오염총량 우선 할당

○ **(현황)**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지역은 수계별 목표수질 준수를 위해 지자체별로 부여받은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 개발 가능*

*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면 그만큼 추가로 지역개발 가능

- 지자체별 개발허용량은 10년 단위[1]로 할당·관리하고, 장기간 개발사업[2]은 다음 10년간 허용량을 先할당(현단계 허용량 60%이내)

1」(현 단계) '21~'30년, (다음 단계) '31~'40년 2」(예) '23년 착공 → '32년 준공

- 최근 반도체 산단 등 장기간 소요 개발사업에서 개발량이 다음 단계 할당 제한(현 단계의 60%)을 초과하여 추진 애로 사례 발생

○ **(지원방안)**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은 원활한 진행 지원을 위해 다음 단계 할당 제한(현단계의 60%) 개선* 추진

* 국가계획 반영 등 **타수계 용수를 조달하여 유량 대폭 증가** 및 **방류수질 강화**로 대폭 수질개선이 가능한 경우 **다음 단계 할당 상한(60%)을 미적용**
(환경부「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개정 추진('24.上))

○ **(기대효과)** 공공수역 수질 담보 범위 내에서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관련 기업의 원활한 개발계획 추진 기대 지원확대

9 (공통) 규제 완화를 통한 클러스터 구성원 밀접 배치 촉진

○ **(현황)** 클러스터 구역을 **업종별·기능별로 분리***하여 **산·학·연** 및 **사업지원서비스**(법률·회계·금융 등) 등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킹 부족**

* (예) 공장, 연구소 등 제조업 위주 정책으로 클러스터 핵심 입주 용지(산업시설 용지 등)에 법률·회계·금융 등 사업지원서비스 입주 불가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1)을 통해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문화·편의시설** 등 **집적**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발표**

▪ 클러스터 내 산업시설구역 등에 **법률·회계·AC· VC** 등 **입주**가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완료**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개정('23.12월)
(첨복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23.11월)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개정('23.11월)

○ **(지원방안)** 클러스터 내 **상업·문화·편의시설 등 입주**가 **가능**한 **복합용지*** **확대** 및 **사업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

* 산업시설(공장), 지원시설(상업·업무·주거 등) 등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용지

▪ **개발계획 변경 없이**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신규 도입 허용**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24.上)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

* 「오송 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완료('24년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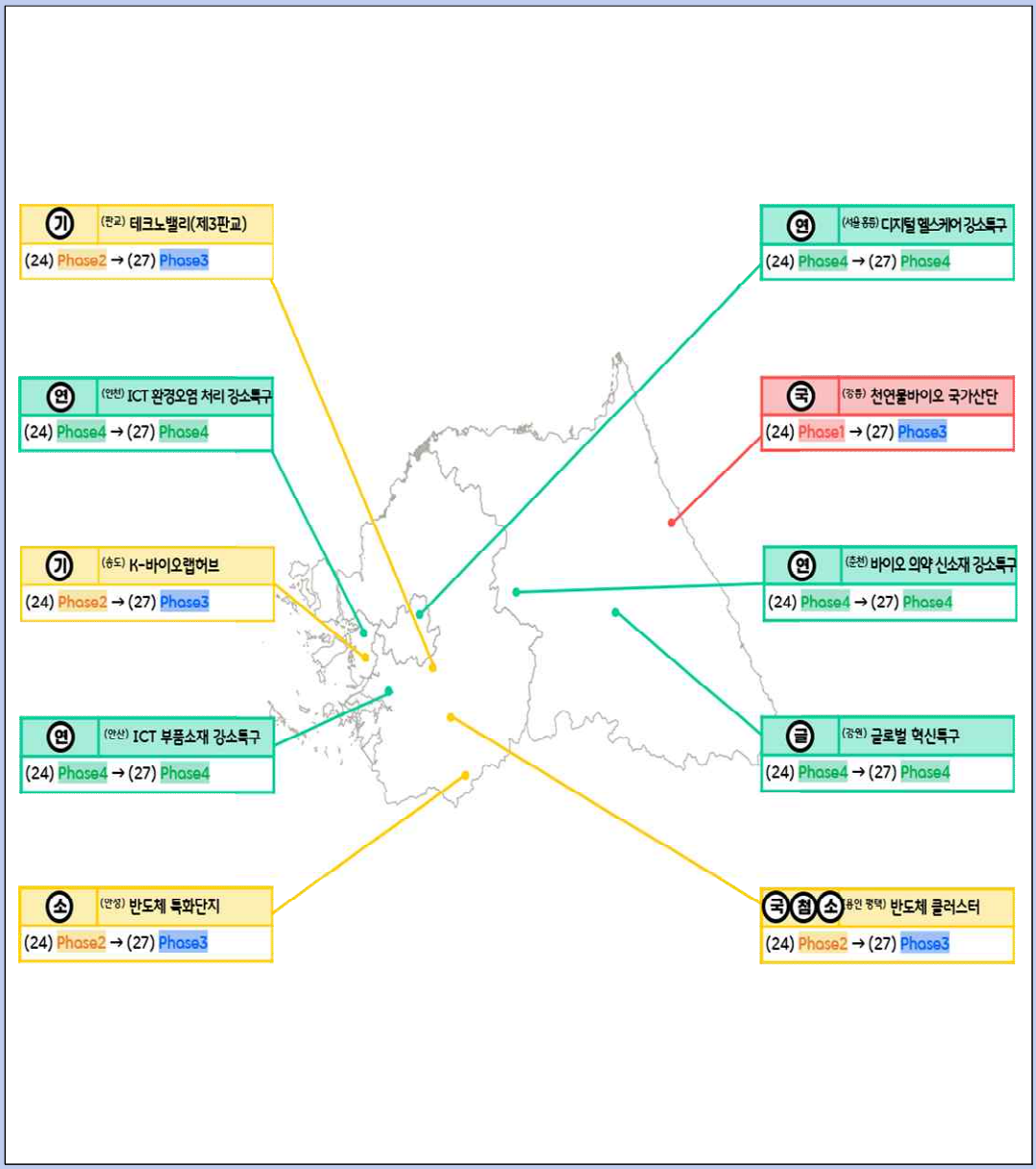
▪ **스타트업**이 **클러스터 입주 법률·회계·컨설팅** 등 **사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바우처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 팁스타운 등 창업보육기관의 컨설팅과 연계

○ **(기대효과)** 클러스터 구성원 간 **밀접 배치**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구성원 간 교류·협력이 활발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 지원확대

2 수도권 · 강원권 클러스터

국	국가첨단산단 2개 중 Phase1 1개, Phase2 1개		(Phase ❶) 단지계획 수립 前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첨	첨단특화단지 Phase2 1개		(Phase ❷) 단지계획 수립·승인
소	소부장특화단지 Phase2 2개		(Phase ❸) 부지 확보·공사, 기반시설 구축
연	연구개발특구(광역, 강소) Phase4 4개		(Phase ❹) 기업 입주, 사업지원
글	글로벌혁신특구 Phase4 1개		
기	판교 Phase2 1개, 송도 Phase2 1개		



1 (첨단)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 검토

〈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 (포함산단)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기흥 사업장,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 (산단면적) 1,671만㎡(약 507만평)
- (민간투자 규모) 622조원(~'47년)

○ **(현황)** 현재 **평택지역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정체**로 **근로 여건이 열악**하고 **신규 산단·공장증설 추진**에 **애로**

* S社 평택사업장 확장, 평택市 방축리 첨단 복합 일반산단 개발사업 등

▪ **시설 확대**와 **산단 조성**을 위해 **다수 인원**이 **출·퇴근**하고 있으나 **도로 체증***으로 **직원 출근**이 늦어져 **증설 사업 지연 발생**

* 오산 IC - 안성 분기점 일평균 교통량 : ('18년) 16만대 → ('22년) 18만대
고덕 IC 일평균 통행량 : ('20년) 6,552대 → ('21년) 9,398대

○ **(지원방안)** 향후 대규모 투자로 **교통량 확대가 예상**되는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 추진**

▪ **수도권 남부 대중교통 소통 지원** 등을 위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 구간 조정 검토**

⇒ **'23년 교통량,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선안 마련**(~'24.上)

○ **(기대효과)** **교통량 집중 문제 해소**를 통해 **근로 여건 개선** 및 **원활한 공장증설 추진** 가능 애로해소

2 (기타) 테크노밸리(제3판교)

❶설계공모 적용대상 기준 제시를 통한 건축계획 절차 명확화
❷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시 수도권정비실무위 통해 신속 심의

〈 테크노밸리(제3판교) 개요 〉

- **(조성내용)** 기업·기숙사·문화공간·대학이 집적된 직·주·락·학 융복합 클러스터
- **(위치)**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 **(면적)** 49만㎡(약 15만평)
- **(시행자)** GH 및 민간 건설사 등

○ **(현황)**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건축계획 및 대학 이전 등 제반 절차의 적기 추진 필요

▪ 테크노밸리 건설사업(민관합동[1]) 추진시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2]가 적용되는지 행정절차 불분명

1」 공공기관(GH, 부지소유자)과 민간 사업자가 분담 수행 방식으로 추진
2」「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공공기관이 1억원 이상 규모의 건축물 설계 발주시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의무 有
↳ 공공기관 건축 설계공모 의무 적용시 건축계획 절차 **최대 1년 추가 소요** 예상

▪ 대학 첨단산업 학과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심의 절차* 필요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과밀억제권역(성남시·수원시 등) 내에서 대학·교육대학 이전시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 **(지원방안)**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하여 제3판교 조성 지원

▪ 설계공모 적용대상 기준*을 제시하여 건축계획 절차 명확화

* 분담수행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설계·발주 계약 등 주체가 될 경우 설계공모 의무 없음

▪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관련 신속 심의를 위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수시 개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 위원장 국토부차관, 위원 교육부 및 관계부처 국장급 등

○ **(기대효과)**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의 원활한 조성 및 대학 첨단산업 학과 적기 유치 애로해소

3 (기타) K-바이오 랩허브(송도)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총사업비 협의절차 신속 추진

〈 K-바이오 랩허브 개요 〉

- (조성내용) 바이오 스타트업에게 입주공간, 연구시설·장비 등을 대여하는 특화지원 센터
- (위치)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
- (면적) 4만m^2(약 1.2만평)
- (총사업비) 2,726억원(국비 1,095)

○ **(현황)** 'K-바이오 랩허브' 총사업비 관리대상 범위*에 지방비(부지·건축비)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거쳐야 하는 절차에 장기간 소요

* 국가 재정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추진단계별로 관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R&D, 건축사업 등 (지자체·공공·민간 부담분 모두 포함)

▪ 설계적정성 검토* 2회(조달청), 착공 前 총사업비 협의(예산실) 등 국가 총사업비 관리대상 행정절차 이행에 약 1년 소요 예상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후 설계도서 내용, 예산·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 요청 (기재부→조달청)

○ **(지원방안)** 「K-바이오 랩허브 사업」 총사업비 협의절차* 신속 추진

* 총사업비관리대상 건축사업은 계획·중간설계, 실시설계 완료 후 조달청을 거쳐 설계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 건축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1개월 이내) 및 총사업비 협의기간(1개월 이내)을 단축하여 사업 추진 집중 관리

○ **(기대효과)** 총사업비 협의기간 단축(1년→2개월)을 통해 핵심사업인 'K-바이오 랩허브' 신속 조성 및 스타트업 조기 입주 기간단축

4 (소부장)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산단 준공시기에 맞추어 변전소 신설 등 전력 공급방안 검토

〈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연마, 세정 공정 연계 등 반도체 장비 공급망 거점 육성
- (포함산단) 동신 일반산단
- (산단면적) 157만㎡(약 47만평)
- (민간투자 규모) 0.9조원(~'32년)

○ **(현황)** 동신 일반산단은 경기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와 연계된 특화단지로서 '30년 가동을 위해 전력 확보 필요

- 산단 가동시 필요 전력은 약 100MW로, 전력 적기 공급 필요
- 산단 부지 동쪽 편에 현재 2개의 송전선로(345kV·154kV 철탑)가 지나가고 있어 향후 산단 내 토지 이용에 제약

○ **(지원방안)** 산단 준공시기에 맞추어 전력수요 예측, 변전소 신설 등 전력 공급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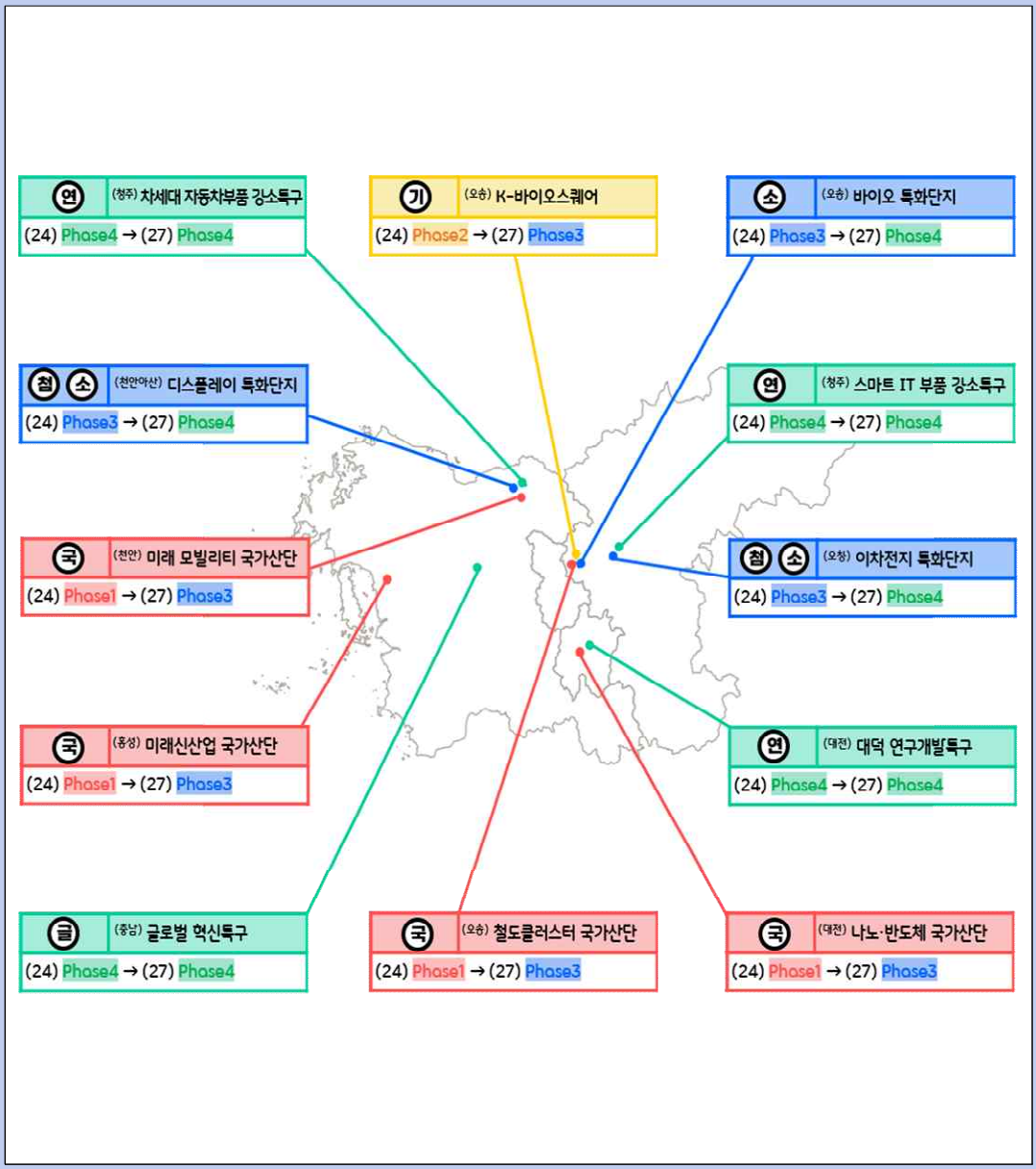
- 전력설비 신설 필요시 산업부, 지자체, 한전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송전선로 보강 등 추진

○ **(기대효과)** 산업단지 전력 인프라 적기 구축, 효율적인 토지 활용을 통해 원활한 기업투자 지원 기반구축

<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위치 >

3 충청권 클러스터

국	국가첨단산단 Phase1 4개		(Phase ❶) 단지계획 수립 前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첨	첨단특화단지 Phase3 2개		(Phase ❷) 단지계획 수립·승인
소	소부장특화단지 Phase3 3개		(Phase ❸) 부지 확보·공사, 기반시설 구축
연	연구개발특구(광역, 강소) Phase4 3개		(Phase ❹) 기업 입주, 사업지원
글	글로벌혁신특구 Phase4 1개		
기	오송 Phase2 1개		



1 (국가)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확장 예정인 산단 내 고속도로 구간 제외한 구역 예타 신청 추진

〈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개요 〉

- (조성내용) 제2대덕연구단지 연구개발 허브 및 반도체 생산 실증단지 조성
- (위치)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
- (산단면적) 530만㎡(약 160만평)
- (시행자) LH + 대전도시공사

○ **(현황)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24년 중 산단 조성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필요**

▪ 국가산단 예정부지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지선**(서대전JCT-회덕 JCT 구간) **확장 계획*이 추진중**이나,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년)에 18.6km 확장계획 반영

▪ 구체적 지선 확장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산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국가산단 조성 사업 구역 확정** 등에 **애로**

* 추후 지선 확장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도로 설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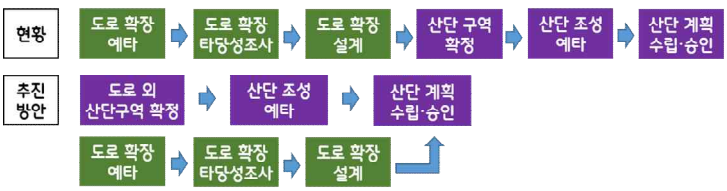
○ **(지원방안)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예상 구역을 제외**한 산단 부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추진**

▪ 추후 **산업단지계획 수립·심의** 등 과정에서 구체적인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계획 확정**시 **보완 검토**

○ **(기대효과) '24년 내 산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도로 설계 후 신청시 대비 3~4년 단축 효과)을 통해 **차질없는 조성** 기대 기간단축

< 대전 국가산단 부지 구조 >

< 지원 방안 >



2 (첨단)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 운송을 위한 차량 운행허가 지원

〈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OLED 초격차 확보 및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
- (포함산단) 아산 1·2 테크노밸리, 아산 스마트밸리,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 1·2, 아산탕정 일반산단, 천안북부 BIT 일반산단, 천안 2·3·4 일반산단
- (산단면적) 1,412만㎡(약 428만평)
- (민간투자 규모) 17.2조원(~'26년)

○ **(현황)** **디스플레이 장비 대형화 추세**에 따라 장비 수출입항(부산항 등)과 특화단지 간 **'제한 차량' 운행이 불가피***

* 도로법령상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총중량 40ton 초과 차량은 운행 제한
→ 운행 필요 장비는 길이 20m, 폭 5~6m, 높이 5~10m 규격으로 제한 차량 운행 필요

▪ **제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관할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는 데 있어 **현행 운행허가 체계**상 **애로사항** 존재

* (고속국도) 국토부장관 (일반국도) 국토부장관, 지자체장 등

❶ 허가 신청 기업이 경로상 도로를 관리하는 개별 도로관리청과 개별적 협의를 진행
❷ 허가기간(통상 2개월) 종료 후 동일한 사항으로 허가 신청 시에도 동일한 서류 제출 필요
❸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행 가능 경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비용·시간 과다 소요

○ **(지원방안)** 대형 장비 운송 차량의 **원활한 운행허가 지원**

❶ 신청기업이 경로상 **각 도로**의 **관할관리청**과 **일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원스톱 협의 체계** 운영(즉시)

❷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허가 기간**을 **연장**하도록 기준 마련(~'24.6)

❸ 운행허가 신청시 **장비 제원, 시설물 등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최적 경로**를 **자동으로 탐색·제시하는 시스템** 도입(~'26년)

○ **(기대효과)**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원활한 **수출·물류 지원** 애로해소

3 (첨단)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 예타 신속 완료 추진(~'24.上)

〈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OLED 초격차 확보 및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조성
- (포함산단) 아산 1·2 테크노밸리, 아산 스마트밸리, 아산탕정디스플레이시티 1·2, 아산탕정 일반산단, 천안북부 BIT 일반산단, 천안 2·3·4 일반산단
- (산단면적) 1,412만㎡(약 428만평)
- (민간투자 규모) 17.2조원(~'26년)

○ **(현황)** 아산 스마트밸리*(2단계)를 제외한 특화단지 내 산단들은 기업입주 단계로, 혁신 생태계 구축 위한 실증센터 지원 필요

* 현재 부지 확보중으로, '24년 중 부지 착공 후 '27년 기업입주 단계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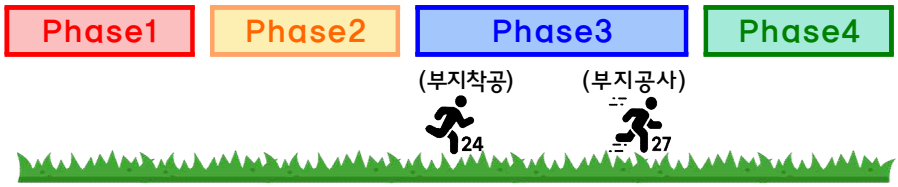
- 국내 기업은 일부 완제품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를 사용중이나, 기술적 난이도와 생태계 구축 미흡으로 시장 선점에 한계
- 이를 감안하여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조사 추진 중 →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필요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23.10월, 9,500억원)

○ **(추진방안)** '24.상반기 내 R&D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추진

○ **(기대효과)**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인프라 소요기간 단축을 통해 관련 기업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확보 지원 지원확대

4 (첨단)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동일 필지 내 경미한 신·증축의 경우 재평가 면제



〈 오창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국내 최대규모 배터리 생산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선도
- (포함산단) 과학산단, 제2산단, 테크노폴리스 산단, 나노테크산단
- (산단면적) 1,461만㎡(약 442만평)
- (민간투자 규모) 4.2조원(~'26년)

○ **(현황)** L社는 생산능력 확대, 공정 변경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부지 내 유휴공간에 **생산시설, 연구동 등을 신·증축**해야 하나,

▪ 해당 부지가 **학교용지와 인접**하여, **기존 건물과 신·증축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m^2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필요[1] → **착공 지연**[2]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

1」 L社의 경우 공장, 연구동 등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이미 10만m^2을 초과하여 교육환경평가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건물 신·증축시마다 교육환경평가 要

2」 교육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승인에 통상 4개월 소요

○ **(지원방안)** 이전에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동일 필지 내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때에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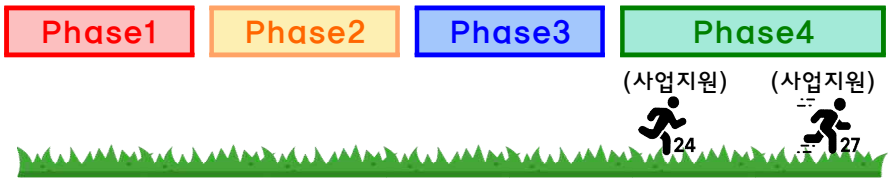
*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3.11.30~'24.1.15) 후 법제처 심사 진행중

▪ 관할 교육청이 **관련 서류 검토** 후 **경미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면제**

*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교육청·산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규칙으로 규정(~'24)

○ **(기대효과)** 향후 **부지내 공장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조속한 착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 기대** 애로해소

5 (연구) 대덕 연구개발특구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K-켄달스퀘어 조성 신속 추진



〈 대덕 연구개발특구 K-켄달스퀘어 개요 〉

- (조성내용) 연구기관·스타트업·사업지원서비스기업 등이 집적한 첨단 R&D 융복합 특구 조성
- (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일원
- (면적) 5.5만m^2(약 1.7만평)

○ **(현황)**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산업생태계가 분리**되어 있어 **네트워킹·융복합 R&D 미흡** 및 **기업 입주 공간 부족**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23.6)을 통해 **출연연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창업보육·기업입주 공간** 등 **조성방안 발표**
- **구역별 세부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대전시, '23.8~12)

* ❶개방형 융합연구 구역(대전시 소유 부지), ❷직·주·락 융복합 구역(과기부 소유 부지), ❸기술창업·스케일업 구역(출연연 소유 부지)

○ **(지원방안)** **출연연과 기업**을 연결하는 **융복합 공간 조성**(~'27)

- **출연연 유휴부지** 및 **대전시·과기부 소유부지**를 활용한 **창업보육·기업입주 공간 조성방안 마련**(대전시, '24.3)
- **사업시행자 지정방안** 등 **특구개발계획안 마련**(대전시, '25.1)

* 법률·회계·AC·VC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 유치 인센티브 방안 검토

- **고밀도 기업 입주공간** 및 **주거·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구역**의 **토지 용도변경*** 및 **건물 높이 제한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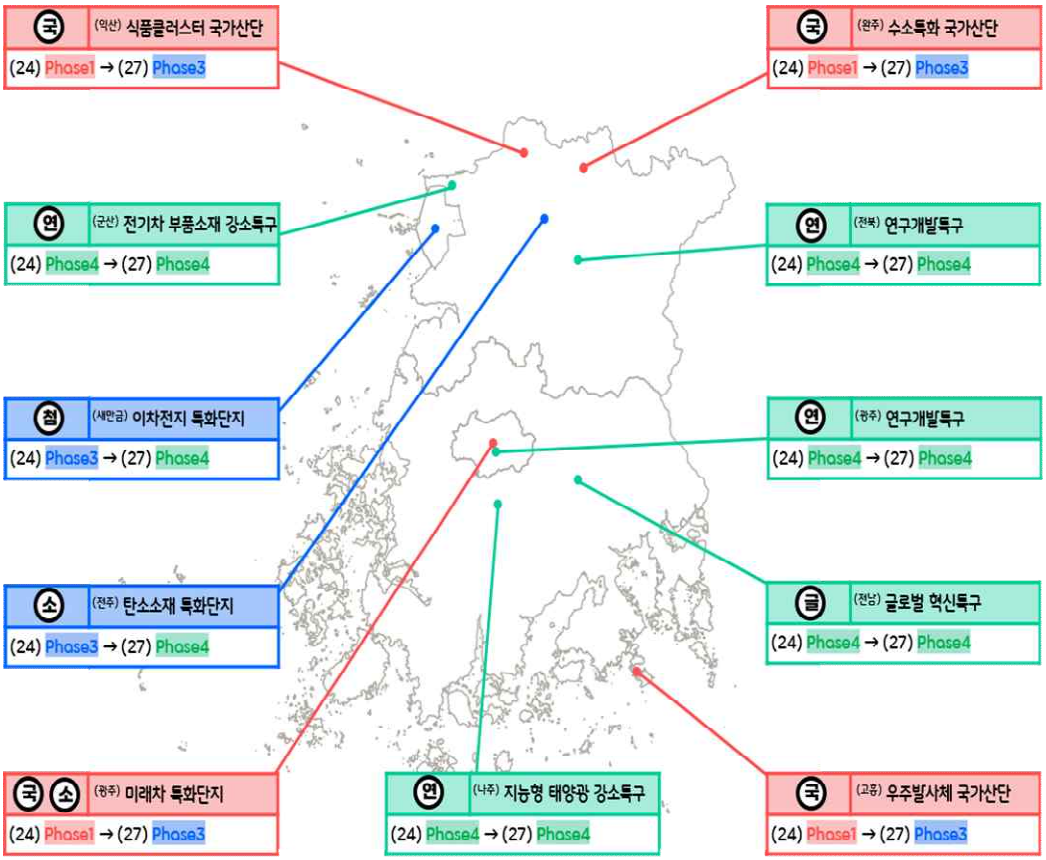
* 예시: 녹지구역(건물 최대 7층) → 상업·공업구역(건물 높이 제한 미적용)

○ **(기대효과)** **연구기관, 스타트업,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등이 **집적**한 **첨단 R&D 융복합 특구 조성** 지원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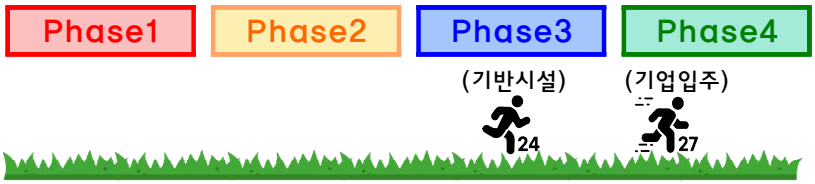
- **출연연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연연과 스타트업간 네트워킹 활성화**

4 호남권 클러스터

국	국가첨단산단 Phase1 4개		(Phase ❶) 단지계획 수립 前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첨	첨단특화단지 Phase3 1개		(Phase ❷) 단지계획 수립·승인
소	소부장특화단지 2개 중 Phase1 1개, Phase3 1개		(Phase ❸) 부지 확보·공사, 기반시설 구축
연	연구개발특구(광역, 강소) Phase4 4개		(Phase ❹) 기업 입주, 사업지원
글	글로벌혁신특구 Phase4 1개		
기			



1 (첨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면적 기준 완화 추진



〈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핵심광물 가공(전구체 등)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 육성
- (포함산단) 새만금 1·2·5·6 공구
- (산단면적) 810만㎡(약 245만평)
- (민간투자 규모) 6.4조원(~'27년)

○ **(현황)** 새만금 산단 내 공장 부지(산업용지)는 **생태면적률*** 10% 이상 확보 의무가 존재하여 **기업의 비용부담, 부지활용 애로 존재**

*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지원방안)**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10%→ 5%)

* 5%로 완화 시에도 산단 전체 생태면적률은 21.8%로 환경부 기준(20% 이상)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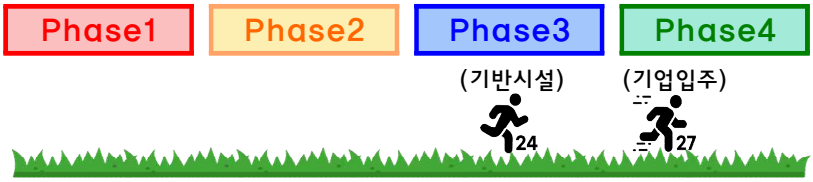
▪ **새만금 국가 산단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변경 신청**('24.2월) **및 환경보전방안 협의**('24.3월)를 거쳐 최종 승인

< 변경 절차 >

실시계획 변경(안) 수립		변경 신청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변경 승인
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 → 새만금청	➔	농어촌공사 ↔ 환경부 등	➔	새만금청
'24.2월				'24.3월		

○ **(기대효과)** 기업의 **공장 부지 활용도 제고**를 통해 **새만금 특화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 운영 활성화** 기여 애로해소

2 (첨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 처리기준 명확화



〈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핵심광물 가공(전구체 등)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 육성
- (포함산단) 새만금 1·2·5·6 공구
- (산단면적) 810만㎡(약 245만평)
- (민간투자 규모) 6.4조원(~'27년)

○ **(현황)** 새만금, 울산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고농도 염 폐수**가 **발생**하는 **핵심소재 생산·광물 제련** 분야 **이차전지 기업**이 **다수 입주 예정**

- **고농도 염 폐수**는 **기업 자체 정화** 후 **공공 폐수·하수 처리장**으로 **유입**하거나 **염 증명***(국립환경과학원)을 받아 **해양 직방류 가능**하나,

* 폐수 수질검사시 바다 속 해양생물종에 부정적 영향(생태독성)을 미치는 원인이 오직 폐수 내 염 성분 때문인 것으로 증명하는 것

- 공공 폐수·하수 **처리장 용량**이 **초과**되거나 **높은 염 농도**로 인해 처리장 내 **미생물 사멸**시 **공공 폐수·하수 처리장 처리 불가**

- 이에 일부 기업들은 **염 증명**을 받아 **해양 직방류 계획 중**이나, **염 성분별 농도 기준**이 **부재**하여 **해양 직방류 가능 여부 불명확**

○ **(지원방안)** **염 폐수 해양 직방류**를 위한 '**염 증명**' **가이드라인 마련**

- 과거 염 증명 결과를 토대로 **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염 성분별**(황산, 염소, 나트륨 등) **농도 제시**

- 염 성분이 **해양생물종**에 초래하는 **독성** 및 **위해 수준 수치화**

○ **(기대효과)** **고농도 염 폐수**가 **발생**하는 **이차전지 분야 투자 불확실성 감소**를 통해 **원활한 기업 입주 및 투자** 지원 애로해소

3 (국가)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검토

〈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개요 〉

- (조성내용)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전후방 신산업 육성
- (위치) 광주 광산구 오운동 일원
- (산단면적) 338만㎡(약 102만평)
- (시행자) 광주도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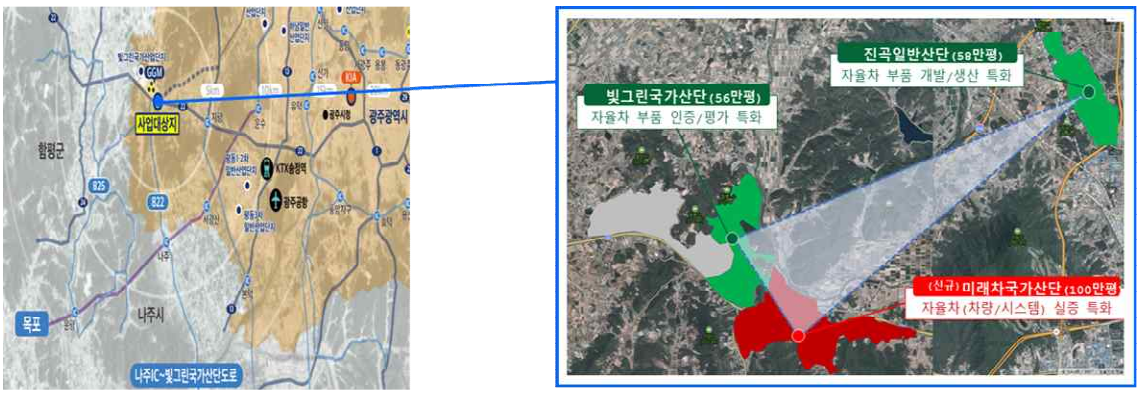
○ **(현황)**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된 규모로 조속히 조성**되어야 하나,

▪ 예정 부지가 GB에 포함되어, **엄격한 해제요건**으로 **해제가 불가능**해 **개발가용 면적 감소** 및 **효율적 부지활용**에 제약

○ **(추진방안)** 지역(비수도권 한정)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뒷받침**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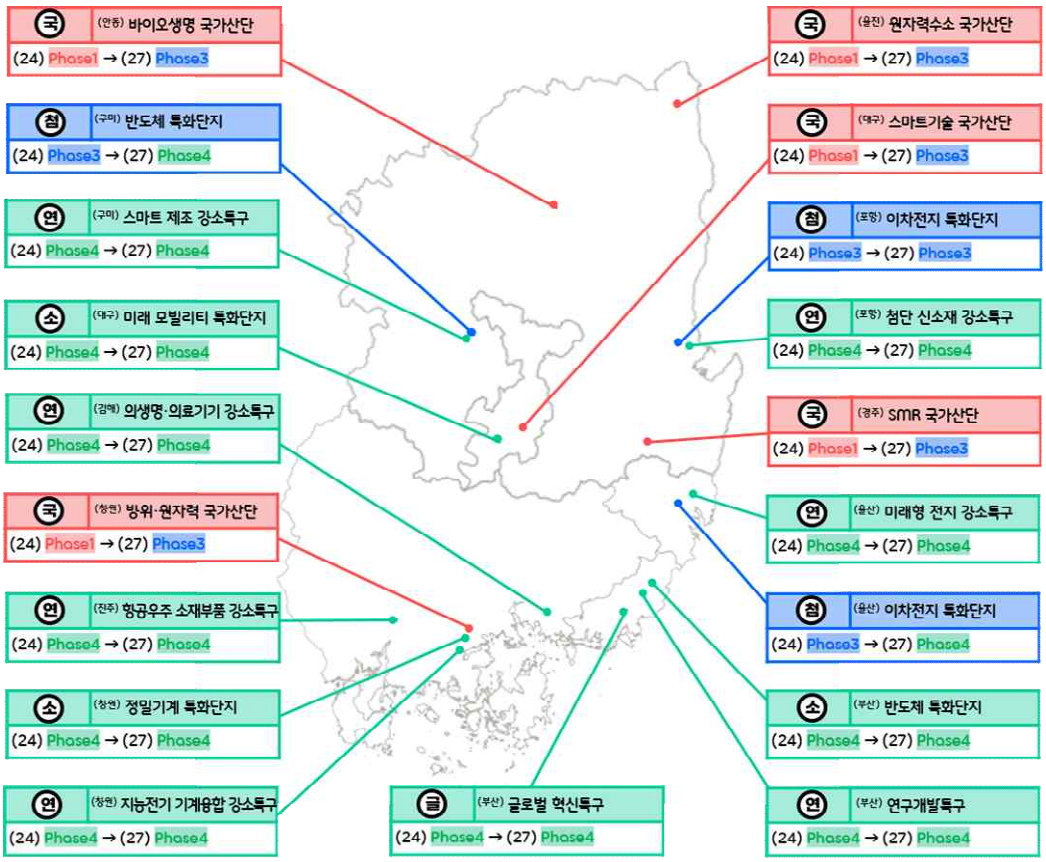
○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확실성 해소** 및 **효율적인 부지활용**을 통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 지원확대

<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위치 >



5 영남권 클러스터

국	국가첨단산단 Phase1 5개		(Phase ❶) 단지계획 수립 前 (사업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
첨	첨단특화단지 Phase3 3개		(Phase ❷) 단지계획 수립·승인
소	소부장특화단지 Phase4 3개		(Phase ❸) 부지 확보·공사, 기반시설 구축
연	연구개발특구(광역, 강소) Phase4 7개		(Phase ❹) 기업 입주, 사업지원
글	글로벌혁신특구 Phase4 1개		
기			



1 (첨단)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상 확대 추진(3월 첨단위 상정)

〈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국내 최대 규모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거점 육성(연 70만톤 이상)
- (포함산단) 블루밸리 산단, 영일만 산단
- (산단면적) 983만㎡(약 297만평)
- (민간투자 규모) 12.1조원(~'27년)

○ **(현황)** 포항 블루밸리 산단에 다수 이차전지 기업 입주 예정으로, 처리수를 연안해역으로 배수하기 위한 지하관로 구축 필요

▪ 그러나, 첨단특화단지 관련 법령상 지원 가능한 산업기반시설에 처리수 지하관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

【참고】 첨단특화단지 지원대상 산업기반시설(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 제31조)

1. 가스공급시설 2. 도로 3. 용수공급시설 4. 전기공급시설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폐기물처리시설 7. 폐수처리시설 8. 통신시설 9. 특화단지의 공동구 10.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11.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 **(지원방안)** 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를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첨단위(3월)에 상정 추진

○ **(기대효과)** 처리수 배수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통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차질없는 입주 및 생산 지원 지원확대

2 (첨단)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업의 신속투자 지원 위한 부지평탄화 조기 시행

〈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국내 최대 규모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거점 육성(연 70만톤 이상)
- **(포함산단)** 블루밸리 산단, 영일만 산단
- **(산단면적)** 983만㎡(약 297만평)
- **(민간투자 규모)** 12.1조원(~'27년)

○ **(현황)** 포항 블루밸리 산단은 일부 부지에 이차전지 업종 입주가 불가능하여 산단계획 등 변경 절차 진행중

▪ 단차가 존재하는 부지의 경우 산단 계획 등 변경 후에도 부지 평탄화에 장기간(6개월 이상) 소요 → 기업 투자 지연 우려

○ **(지원방안)** 기업이 입주 계약 체결 후 신속히 생산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LH)가 부지 평탄화 공사를 先시행*

* 단, 부지 평탄화 공사 비용은 입주 협약 체결 기업이 부담

	국토부	산업부		기업		기업
현황	❶산단계획 변경	❷관리기본계획 변경	→	❸산단 입주 계약 체결 및 부지 평탄화	→	❹이차전지 생산시설 착공
	~'24.上			6개월 이상		'25.上 이후

	국토부	산업부		기업		기업
추진 방안	❶산단계획 변경	❷관리기본계획 변경				
	사업시행자(LH)		→	❹산단 입주 계약 체결	→	❺이차전지 생산시설 공장 착공
	❸부지 평탄화					
	~'24.上			'24.上		'24.9월

○ **(기대효과)** 이차전지 생산시설의 신속한 착공(6개월 이상 기간 단축)이 가능해져 기업의 적기 생산 및 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 기간단축

3 (첨단)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블루밸리 산단 전력 인프라 확충

〈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 개요 〉

- (조성내용) 국내 최대 규모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거점 육성(연 70만톤 이상)
- (포함산단) 블루밸리 산단, 영일만 산단
- (산단면적) 983만㎡(약 297만평)
- (민간투자 규모) 12.1조원(~'27년)

○ **(현황)** 블루밸리 산단은 이차전지 기업이 '24년 신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관리기본계획 변경 심사중***

* 현재 산단 내 일부 부지가 철강 업종 중심으로 입주 허용되어 이차전지 업종 입주 제한 → '23.11월 「기업 투자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통해 신속 변경 추진 발표

▪ 향후 '25년까지 약 260MW, '28년까지 약 600MW 이상의 추가 전력공급이 필요하나 대규모 전력 공급을 위한 **인프라 부족***

* 현재의 송전선로 전선과 변압기로는 필요한 고용량 전력의 원활한 공급이 곤란

○ **(지원방안)** 블루밸리 산단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교체·보강** 및 **변압기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전력공급량 확대**

▪ '25년까지 산업단지 인근 65km 구간(신포항~신영일, 양북)의 **송전선로를 대규모 전력 공급 가능한 전선으로 교체·보강***

* (현재) 저용량 전선(허용용량 약 220MVA) → (개선) 고용량 전선(약 420MVA)

▪ '25년까지 **신포항변전소에 345kV 변압기 1기 추가 설치**(4 → 5기)

○ **(기대효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 수요에 적합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통해 **원활한 이차전지 생산·투자** 기대 기반구축

4 (국가)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검토

〈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개요 〉

- (조성내용) 방위·원자력 산업 관련 연구·생산·융합 거점 육성
- (위치) 창원 의창구 북면, 동읍 일원
- (산단면적) 339만㎡(약 103만평)
- (시행자) LH + 경남개발공사

○ **(현황)**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된 규모로 조속히 조성**되어야 하나,

▪ 예정 부지가 GB에 포함되어, **엄격한 해제요건**으로 **해제가 불가능**해 **개발가용 면적 감소** 및 **효율적 부지활용**에 제약

○ **(추진방안)** 지역(비수도권 한정)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뒷받침** 검토

○ **(기대효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불확실성 해소** 및 **효율적인 부지활용**을 통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 지원확대

<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조성 위치 >

Ⅴ. 주요 과제별 향후 추진계획

정책 과제	부처 · 기관	추진시기
• 수질오염총량제 제도개선	환경부	’24.2
• 제3판교 사업 관련 설계공모 의무 적용 기준 제시	국토부	’24.2
• 고흥, 울진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타면제 추진	기재·국토부	’24.2 ~
• 제한차량 운행허가 원스톱 협의 체계 운영	국토부	’24.2 ~
•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재정지원 기준 관련 고시 개정	산업부	’24.3
•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농어촌공사 새만금청	’24.3
• 대덕 연구개발특구 K-켄달스퀘어 조성		
- 창업보육·기업입주 공간 조성방안 마련	대전시	’24.3
- 특구개발계획안 마련	대전시	’25.1
• 국가첨단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입주수요 산정기준 개편	KDI	’24.5
• 제한차량 운행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	’24.6
•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동일 필지 내 경미한 신·증축시 재평가 면제	교육부	’24.1Q
•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국토부	’24.1Q
• 클러스터 내 복합용지 확대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국토부	‘24.上
- 「오송 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충북	‘24.下
•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 건폐율, 용적률 상향 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	과기정통부	’24.上
• 강소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과기정통부	’24.上
• 평택 반도체 산단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	경찰청	’24.上
• 아산탕정 일반산업단지 R&D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처리	과기부	’24.上
•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부지 평탄화 공사 先시행	LH	’24.上
• 염 증명 가이드라인 마련	환경부	’24.下
• K-바이오 랩허브 관련 총사업비 관리절차 신속 추진	기재부, 조달청	’24.下 ~
• 포항 블루밸리 산단 송전선로 교체·보강 및 변압기 추가	산업부·한전·포항	~ ’25
• 고중량 차량 자동운행허가 시스템 도입	국토부	~ ’26